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4
----------	-----

발의연월일 : 2020. 06. 10.

발 의 자 : 김윤덕 · 이정문 · 조정식
이원택 · 신동근 · 한병도
정춘숙 · 신영대 · 이상직
이용호 · 윤준병 · 안호영
김수홍 · 김성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고,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는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개정이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3.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
- ② 특례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u>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p>	<p>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u>① -----</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u> <u>-----</u> <u>-----</u> <u>-----.</u> <u>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u> <u>2.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u> <u>3.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u> <u>② 특례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